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 서 면 답 변 서

( '23년도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23. 10. 27. )



병무청

## 위원별 목차

1. 정성호 위원 .....	1
2. 김병주 위원 .....	5
3. 한기호 위원 .....	65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

<정성호 의원>

11-7. 병무청은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해킹메일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3년 연속 해킹메일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나온 청이 3곳이 있어 관리가 필요함. 링크클릭자에 대한 개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나온 청에 대해선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병무청 병역자원국>

- 해킹메일 모의 대응훈련 시 링크 클릭자가 나온 청은 매년 소속기관 BSC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연속으로 발생한 청은 추가 감점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

<정성호 의원>

11-8. 병무청은 현역, 예비역 등 병역정보를 다루며 입영과 동원훈련 소집을 담당하고 있어 해킹될 경우 안보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음. 비록 1명일지라도 해킹이 발생되었을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무청 병역자원국>

○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병무청에서 다루는 병역정보는 국가안보의 중요자산으로 단 한 건의 병역정보라도 해킹되지 않도록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정성호 의원>

11-9. 2024년 해킹메일 모의 대응훈련에서는 단 1명의 해킹 메일 링크클릭자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신경써주길 당부함.

<병무청 병역자원국>

- 해킹메일 대응조치 요령 및 정보보호 교육 강화로 '24년 훈련에서는 단 1건의 링크 클릭자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 더불어민주당 김 병 주 위원

<김병주 의원>

12-병무-1.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42개를 획득했는데, 면제 인원은 더 많다고 하는데 몇 명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사유 체육요원 편입 가능 인원은 62명입니다.
  
- 개인종목은 금메달 1개를 획득한 경우 체육요원 편입 가능 인원이 1명이지만, 단체종목은 금메달 1개를 획득한 경우 소속선수 모두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금메달을 달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 이 선수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선수는 병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가능합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금메달 수상 단체종목 선수로서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 중에  
병역을 마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면제 후 병역은?

<병무청 사회복무국>

- 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3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복무기간 중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 BTS의 병역이행 현황은?

<병무청 입영동원국>

- 3명은 병역이행 중이며,
- 나머지 4명은 입영대기 중에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 BTS는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며 한국을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작년에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자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병무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사회복무국>

-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보충역 규모 감축 기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6. 이 문제는 병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BTS나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 등과 같이 개별 사안이 아니라 병역특례 전반적인 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병역의 형평성·공정성, 보충역 규모 감축 기조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7. 병역 미이행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자들이 매년 수천명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네, 알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8.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병역기피자가 약 2천 명, 국적이탈·상실자는 약 2만 명으로 국적이탈·상실이 병역기피자보다 약 10배 이상 많아 공정 병역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 임영동원국>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다만, 국적변경자 모두를 병역기피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 이로 인해 공정병역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9.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 5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원안이 아니더라도 수정안이나 대안으로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통과에 병무청에서 나서서 관련 기관인 법무부, 행안부, 외교부와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병무청 임영동원국>

-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 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정병역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

-----<참고자료>-----

- 병역회피 목적 국적변경자 제재 법안(‘20.12.17. 김병주의원)

법안명	개정(안) 주요내용
재외동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는 <u>45세까지</u>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 제한
국적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는 <u>31세 이후</u> 국적회복 제한
출입국관리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는 <u>37세까지</u> 취업활동 제한
	병역기피 목적 국적변경자는 <u>입국금지</u>
국가/지방공무원법	병역 미이행 국적변경자는 <u>45세까지</u> 공직임용 배제

<김병주 의원>

12-병무-10.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우리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여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 입영동원국>

- 위원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등으로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 나가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1. 현재 병력자원이 50만을 유지해야 하는데 몇 만으로 유지 되고 있는가?

<병무청 입영동원국>

○ 국방부에서는

「'22년도 군 운영 병력 수준은 5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2. 50만명 병력유지를 위해서는 연 몇 만명의 남성이 필요한지?

<병무청 입영동원국>

- 국군 운영 병력 50만 명은  
간부, 병을 포함한 인원으로,
-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소요 병력은 약 22만 명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3.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1차 병력자원감소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2차 병력자원감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2차 병력자원 감소 기간 중 대책 강구 필요)

<병무청 임영동원국>

- 1차 병력자원감소 시기는 '22년까지이며,
- '30년 중반 이후를 2차 병력자원감소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필요 시) AI 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국방혁신 4.0에 따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으로 저인력·고효율의 국방체계로 개선하여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려 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4. 표를 보시면 2037년에는 2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현 50만 병력을 유지 가능합니까?

<병무청 임영동원국>

-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 충원이 필요하나,
- 20만 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현 수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5. 2차 병력감소시기에 대비해 병력을 40만으로 축소 의견과 병력유지를 위한 대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 임영동원국>

- 2차 병력감소 시기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6.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합헌으로 나왔으나 유의할 부분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헌법재판소도 2차 인구격감기 도래에 따라 현 제도로는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가능합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50만 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7. 병무청에서 '2040년대 수급규모 예측 연구'관련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5월 27일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현 병역제도 하 각 국별 2040년대 군 병력 획득 가능 규모 및 예비병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입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문 내용을 수용하여 양성 징병제 도입, 모병제 전환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에 포함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병무청 임영동원국>

- '2040년대 군 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 용역'은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8. 연구용역이 나오면 국방부와 협의 공론화가 필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 국방부 계획에 따라  
우리청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19. 의무경찰 제도도 병력 50만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폐지하였음. 맞는지?

<병무청 임영동원국>

- 네, 그렇습니다.
- 병역자원 부족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0. 의경 부활에 대한 병무청 의견은?

<병무청 임영동원국>

-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임을  
우선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1. 병무청은 이종섭 장관이나 총리실로부터 이와 관련된 협의나 협조가 있었는지?

<병무청 임영동원국>

○ 없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2. 20년부터 대체역 복무가 시작된 지 4년차입니다.  
현 대체역법이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형태는 합숙 등으로  
규정한 대체역법의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24건이나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는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12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3. 지속적인 헌법소원은 법을 다시금 돌아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 '20년 6월 도입된 대체역 제도는 이제 시행된 지 3년 남짓 되었고, 올해 10월에야 복무만료에 따른 첫 소집해제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 '23. 10. 25. 첫 소집해제자 : 60명
- 그리고 현재 100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4. 인권위에서도 대체복무 기간 6개월 단축 및 복무 기관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거나 조치한 것은?

<병무청 사회복무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다양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제도는 도입된 지 이제 3년 남짓 된 시행 초기이고, 현재 100여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5. 대체복무역의 복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병무청 사회복지무국>

- 대체역 제도에 대해 현재 100여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가 나오면, 군 복무 중인 장병과의 형평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6. 대체역 대기자들의 대기기간이 23년은 31개월, 24년은 29개월, 25년은 22개월로 줄어들고 27년에 적체해소가 예상됩니다. 적체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한 것이 있는지?

<병무청 사회복무국>

- 법무부와 협의하여 복무시설 및 시설별 정원을 확대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복무시설 확충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끝>

※ 당초 '22년 32개 기관 1,620명 정원을 계획하였으나 올해('23년)말까지 27개 기관(1,441명) 완공 후 '25년까지 34개 기관 1,903명으로 확대할 예정임

<김병주 의원>

12-병무-27. 대체역 실태를 법무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와 조치한 결과는?

<병무청 사회복지무국>

- 법무부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한 대체임무 부여나 복무 위반 사례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28. 병무청에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병역법 제43조에 따라 법무부와 합동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인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법무부는 현장 복무실태 점검 등 복무부실 예방,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를 포함한 복무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 \* 대체역법 시행령 제35조
-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의 금지업무 종사 여부를 조사합니다. <끝>
  - \* 병역법 시행령 제93조 제8항

<김병주 의원>

12-병무-29. 대체복무요원 중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유증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22년 법무부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복무초기에 환경변화에 따른 정신과적(우울증 등) 증상이 있는 대체복무요원 1명\*이 있었으나,  
\* '22. 6. 13.(소집) / '22. 11. 2.(실태조사)
- 현재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0. 현역병의 경우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유증상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병무청 사회복지무국>

- 현역병은 증상에 따라 관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1. 대체복무요원 중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유증상자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병무청과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공무 외 질병인 경우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연간 청원휴가 60일)를 받을 수 있으며,
- 청원휴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분할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제도(병역법 제31조의3) : 본인의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다시 복무

<김병주 의원>

12-병무-32.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현황은 몇 명입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류 검사 최종 양성자는 최근 3년간 11명이며,  
경찰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기소여부는 검찰의 소관사항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3. 입영 전부터 마약류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입영전부터 마약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되면 현 조직과 예산으로 한계, '24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에 있어 '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약류 검사를 위해서는 1인당 12,000원이 소요되며, 검사시약(재료비) 약 6.9억원\*이 필요합니다. <끝>
- \* 예산 소요(7종 검사) : 간이검사키트(개당 1.2만원) × 5만8천여명('24.7.~12월)

<김병주 의원>

12-병무-35. 검사에 필요한 인력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마약류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24년 기준 10명이 필요합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6. 국방부는 1차로 간이검사를 하고 양성자로 판명되면 2차 정밀검사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국방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7. 경찰청과 공조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병무청 병역자원국>

-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자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신고)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8.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바랍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

- 마약류 전원 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과 시 내년도 시행에 대비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위님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3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관련 수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0.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은 의무입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의무는 아니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안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근무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1. 최근 5년간 수련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20년도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외부인의 병원 출입 통제가 강화되고,
- 입영판정검사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수련 가능 일수 감소로 수련병원 선정에 제한이 있어 수련 실시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2. 수련제도 목적이 공정한 병역판정을 위한 검사  
능력 향상입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3. 전담의사가 수련병원을 개인적으로 찾게 해서는 안되며 병무청과 병원간 MOU를 맺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무청 주관으로 국·공립병원 등에 수련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
- 병원별, 전문과목별 수련 수요를 파악하여 전담의사 ↔ 수련병원 간 매칭(matching)을 시켜 수련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4. 입영 전 직업선호도 검사를 포함한 병역진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2년 3.2만여 명, '23.9월 기준 2.9만여 명입니다. '22년 기준 주요 서비스 대상의 약 11.4%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끝>  
\* 전체 수요대상 283,121명 중 32,287명이 서비스 이용

<김병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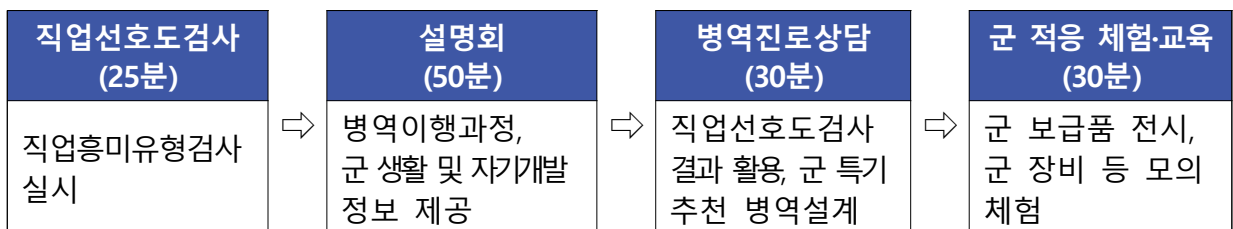
12-병무-45.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야 합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개인이나 단체(학급 단위)별로 전국 8개 지역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센터 운영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 주요 내용은 직업선호도검사, 병역이행과정 및 군 생활 정보제공 설명회,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활용한 병역진로상담, 군 장비 모의체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



<김병주 의원>

12-병무-46.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주요 대상은 병역을 준비하는 의무자로  
고등학생 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입니다.
- 그 외 병역의무자의 부모, 초등·중학교 학생, 학교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7. 상담관 1명이 한달에 상담은 몇 건합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센터에 방문하는 사람 및 직업계고·대학 등에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약 110명 내외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8. 병역진로 심층상담을 위해선 한 사람이 할애하는 상담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사전 직업선호도검사 진행 이후 25분, 분석 및 상담 1시간-1시간 반이 소요된다는데 상담인원은 충분합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전문상담관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더 많은 병역이행자에게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전문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49. 상담관은 어떤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로설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국방(군 경력) 및 직업상담 등 전문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 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현역 모집분야, 상담, 교육 등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0. 청년들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체계적일 수 있도록 병무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무청 입영동원국>

- 올해부터는 화상상담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센터별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여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 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병역의무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1. 해당 서비스의 원활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병무청 입영동원국>

- 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비롯해 내년에 설치 예정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2. 작년 국감에도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2026년까지 감소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네. 맞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3. 최초 계획 대비 100명이 증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반도체를 강조하니까 증원하였는데 반도체 요원은 몇 명이나 추가 배정했습니까? 현재 미편입인원이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추가 증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미편입 인원이 많은데 10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무청 사회복무국>

- 증원의 의미라기보다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해 석·박사간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 석·박사 배정인원은 2,300명을 유지하되, 석사는 100명 줄이고 박사는 100명 늘려 반도체 분야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 매년 편입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최근 5년간('18년~'22년) 87.2% 수준입니다.
- 향후,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추이를 보며 장기적으로 배정인원 조정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4. 병역면탈과 관련한 기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수사 결과  
브로커 2명, 면탈자 109명, 공범 26명 등  
총 13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5. 뇌전증 같은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범죄 발생 이후로 병무청은 뇌전증 유무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뇌전증에 대한 병역판정 시  
약물농도검사 확대,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등  
병역판정검사 절차를 강화하였고,
- 뇌전증 판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 '24년 병역판정검사부터 적용할 예정

<김병주 의원>

12-병무-56. 현재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를 통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

-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

<김병주 의원>

12-병무-56. 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을 수행하는 인원들에게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가장 엄정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특사경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국민익협 한 기 호 위원

<한기호 의원>

16-42. 병역면탈 범죄의 특징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병역면탈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없고,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 많은 부분 제보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전담의사 등 직원의 제보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16-43. 병역면탈을 신고한 직원(전담의사 포함)과 범죄를 수사한 특사경 등에게 범죄수입금의 일부를 인센티브 부여 필요,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한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범죄수익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병역면탈을 신고한 직원과 특사경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 별도 규정 신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

<한기호 의원>

16-44. 병역면탈 범주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인가?

<병무청 병역자원국>

-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대상 범주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이  
해당되는데,
- 병역면탈 범주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포상금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